

# 세계한인비즈니스 사전 준비 총력

###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 분야별 점검 연계프로그램·문화공연·투어프로그램 등 검토

전북자치도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4개월 가량 앞두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대회 전반에 걸쳐 분야별 일일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 점검회의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된다.

먼저 △25일과 26일 이틀간은 도 연계프로그램 △27일은 문화공연 △28일은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29일 2일은 교통 및 숙박 분야 등에 대해 부서장의 준비상황 보고, 점검,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 5일에 걸친 점검 회의를 통해 지니포럼, 일자리 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 국제드론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도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회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 투어, 당일 및 1박 2일 선택형 투어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행사 등을 구성해 도내 다양한 관광지로 참가자들을 유도하고 투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회 기간 행사장을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퓨전국악 공연, B-Boy 공연, 노상 놀이 통합퍼레이드 등이 개최되며, 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상설 프로그램도 진행해 전북의 매력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야별 점검을 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대회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전북



25일 오전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반에 걸쳐 분야별 일일 점검을 주재하고 있다.

의 맛과 멋을 느끼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해 우리도의 역량을 선보이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재외동

포 기업인 등 3,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 세계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이만호 기자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 받아야”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 원시설에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자치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 시설을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 소재 시·도) 20%'로 수정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원전 지역자원 시설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체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자치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

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지역자원시설에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

## 건협 전북도회 감사패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5일 전북건설산업발전추진위원회 역할을 하고 전반기 마무리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에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재철 회장은 "국주영은 의장과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이 평소 지역건설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지난해 새만금 예산 확보 활동에 감사드리고,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였기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농생명 바이오 거점도시 정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슬로건으로 시군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읍시를 찾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잊혀진 전북의 영웅 '황진 장군' 재조명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오늘 학술 심포지엄 개최

임진왜란 당시 웅치·이치 등 전투에서 외적 격퇴에 큰 공을 세운 '무민공 황진 장군'의 업적과 위상을 기리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총회의실에서 '임진왜란 재조명-무민공 황진 장군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황진 장군의 본관은 정수로, 황희의 5세손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웅치·이치 등 여러 전투에서 외적을 격퇴시키며 호남을 보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1593년 6월 진주성 전투에서 9일간 섬을 사수하다가 전사했다.

선조는 무민공의 시호를 내려 그를 애도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은 최후를 전할때는 당시 '황진이 죽었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무용을 떨친 인물

이다. 이후에는 남원에 정충사, 진주에 창렬사를 세워 제향하며 사액의 은전을 내리기도 하였다.

학술심포지엄은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덜 알려진 황진 장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업적과 위상을 기리기 위해 열린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는 하태규 전북대 교수의 '임진왜란 호남 방어선과 웅치 그리고 이치, 황진 장군'이, 두 번째 번째로는 이상훈 해군교육사령부 교수의 '진주성 전투에서의 황진 장군의 역할과 의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호남에서 영남까지 이어진 황진 장군의 업적과 일대기를 돌아볼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하우봉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만호 전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순순 전주대 교수, 발표자들과 더불어 토론

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임진왜란 황진 장군, 역사재조명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황진 장군 선양을 위한 동상건립, 교육프로그램 추진, 관광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무민공 황진 장군'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호국영령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전북 지역에서 호국을 위해 활동했던 황진 장군과 관련된 심포지엄이 전북학 연구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25일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15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한주)에서는 7개 읍·면, 11개소에 대한 실행조사 결과를 현장의 개선사항 제시와 함께 사후관리, 향후 사업장의 건설 운영 등을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집행실적 및 이행 현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장수=관훈 기자

### 임실군의회, 제9대 하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 의장-장종민 의원 부의장-양주영 의원 등

임실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하반기 임실군의회(위원장 김남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집행실적 및 이행 현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장수=관훈 기자



소속 3선 의원으로 당선 인사를 통해 "제9대 하반기의장단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희망과 소통 위원장에 김중규 의원, 농업복지위원장에 김정흠 의원을 각각 선출해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장종민 의장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의회, 군민 편에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준 기자

양주영 부의장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의회, 군민 편에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준 기자

### 농민들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국가 책임 강화

### 민주 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 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 민주당 소속 진안군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 선출

### 동창욱 의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지역위원회가 제9대 진안군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로 동창욱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4일 완진무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완진무지역위원회 진안군 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 민주당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 중 3명이 찬성해 하반기 의장 후보로 동창욱 의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 하반기 의장단은 오는 7월 1일 개최되는 진안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지역위원회 측 관계자는 "진안군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 선출은 민주당 당규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안군의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해 당론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 사유)에 의거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